



OECD의 실체와 가입에 따른 영향

현재 2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개발협력기구)는 91년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등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93년 각료회의에서 OECD 무역위원회 및 환경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10개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환경문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규제 또한 예상되고 있다. 한지 우리나라는 OECD 가입신청을 한 상태이며 내년도 가입예정으로 있어 환경분야 뿐만아니라 다각적인 면에서 찬·반 양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OECD의 실체와 가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박기홍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經博

우리나라의 OECD 加入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내년 말 가입을 목표로 가입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물론 OECD 가입이 곧 바로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소위 부자나라들의 친목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우리나라는 量的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금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규모가 세계 12위에 달하는 등 경제규모에서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대접받는데 별로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전반의 先進化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제야 선진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OECD 가입은 경제체제의 선진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입의 조건인 각종 義務의 이행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OECD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연구와 규범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및 개발 등 특정분야만을 다루는 데 반해 OECD는 경제정책, 경쟁, 에너지, 교육 및 소비자 보호 등 경제·사회복지 문제를 포괄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에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場이자 경제·산업정책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政策 카르텔 성격도 갖고 있다.

OECD란 어떤 기구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국간의 협의기구로서 1961년 발족되었다. OECD의 모태는 전후 유럽의 부흥을 위해 마련되었던 마샬 플랜의 일환으로 1948년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기 때문에 발족 당시의 회원국은 대부분 유럽국가였고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만이 참여하여 歐美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대양주권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멕시코가 가입하는 등 최근 들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OECD는 기본적으로 WTO나 GATT처럼 國際規範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회원국 전체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원칙 및 지침을 협의하는 클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주요한 의사결정은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기초로 회원국간의 合意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본이동 자유화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등 일부 구속성 규약을 제외하고는 강제력보다 회원국간의 신뢰관계에

의해 결정사항이 준수되도록 하고 있다. 자연히 토의방식에서도 협상 아닌 협의의 성격을 중시하고 점진적인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는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협의와 결정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편이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및 개발 등 특정분야만을 다루는 데 반해 OECD는 경제정책, 경쟁, 에너지, 교육 및 소비자 보호 등 경제·사회복지 문제를 포괄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에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場이자 경제·산업정책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政策 카르텔 성격도 갖고 있다.

OECD가 종합적인 협의체인 만큼 그 조직은 실로 방대하다. 주요 組織으로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상부 조직과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사무국 등의 하부조직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간자문기관 및 반독립적 부속기관이 있다. 이사회에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가 있으며, 특히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회원국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

이 만나 주요 정책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委員會에는 집행위원회 산하의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과학 기술정책위원회 및 철강위원회 등 26개의 전문위원회와 보조 성격을 갖는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 밑에는 다시 200여개의 실무 작업반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철강위원회, 원자력기구 등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그밖에 환경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委員會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OECD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여타 회원국 또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통화·산업·저시경제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간의 입장을 조정하여 공동의 提案을 마련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체제의 개선을 위한 선도적 활동으로서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채택, 경상무역의 거래,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투자 확대 등의 지침 제정, 다국적기업의 활동 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에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은 지금까지 세계경제 전체의 成長과 秩序 構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WTO, IMF, EU, NAFTA 등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의 일원 이므로 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

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한편 그동안 OECD가 수행한 중점과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세계경제의 중심과제가 바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다. 60년대에는 戰後 復舊를 기반으로 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후진국의 개발문제가, 70년대에는 석유 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극복이, 그리고 8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선진국간의 정책협조와 국제무역의 활기 회복이 주요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정립에 일조를 하였으며, 환경, 기술, 노동 등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과 기업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경제여건 조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舊蘇聯·東歐 등 구사회주의 경제와 동아시아 선발개도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포용하고, EU, NAFTA, 일본·동아시아권이라는 세계경제의 3극화 추세에 대응하는 것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가입에 따른 부담

OECD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과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입의 시기상조론은 현재 우리나라경제의 위상이 OECD 가입의 負擔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입을 찬성하는 논리는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장기 利得을 강

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가입을 결정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협상 등을 통해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OECD 가입의 가장 큰 부담은 회원국으로서의 다양한 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이 되는 만큼 세계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제공해 주는 우대조치들로부터는 거의 卒業하였으나 그렇다고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그러한 활동에의 참여가 의무사항으로 주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이미 OECD 회원국 중 10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OECD 가입이 이루어지면 의무이행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義務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무와 회원국들의 이행을 권고하는 성격을 가진 권고적 의무, 그리고 경제의 자유화를 일정 수준까지 하여야 하는 자유화 의무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은 자본이동에 관한 규약 및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에 관한 규약으로 대변되는 自由化 義務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다. 또한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에 관

한 규약은 무역, 운송, 보험,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많은 관행들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및 기업활동에 대해 국내외기업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開放化나 國際化는 현재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방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본이동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외국기업의 활동 등의 분야에서는 자유화 정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부문의 自由化가 우리나라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게 되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화의 의무는 가입협상 시 일부를 유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자유화한 후에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加入條件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적 의무로는 GATT 제11조국(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 철폐) 및 IMF 제8조국(자국 통화와 외환간의 자유로운 교환 보장)으로의 이행과 국민총생산의 0.7% 이상을 開發國에 대한 援助로 사용하는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GATT 제11조국 및 IMF 제8조국으로 이행하였으나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GNP의 0.0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OECD 가입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권고사항이고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援助比率도 0.33%에

OECD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義務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무와 회원국들의 이행을 권고하는 성격 가진 권고적 의무, 그리고 경제의 자유화를 일정 수준까지 하여야 하는 자유화 의무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은 자본이동에 관한 규약 및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에 관한 규약으로 대변되는 自由化 義務라고 할 수 있다.

불과하여 당장 큰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도 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 의무는 OECD의 제반 결정, 권고 및 협정, 각료선언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이는 대부분 선언적인 것이 많고 법적 구속력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OECD 經費의 부담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운영비의 1~2%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으로 기대되는 이득

이처럼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利得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輸出 증대,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가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을 가입의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OECD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진국들의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선진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자들에게 世界化, 國際化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은 경제의 선진화와 제도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OECD 회의에 참석하여 선진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세계경제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경우 이들의 국제감각이 신장되어 사회 전체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교섭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經濟外交의 효율을 높이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통계기법을 발전시키고 선진국들의 내부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OECD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統計와 情報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은 사무국에 의해 수집, 정리되어 회원국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회원국에게만 배포되는데 OECD 가입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언을 수 있게 된다.

또한 OECD는 국제무역, 국제금융, 과학기술, 경제정책, 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및 세미나 등에서의 참여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이득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초기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질서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國際貿易과 관련하여 환경, 기술, 노동 등을 다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國際金融 측면에서도 최근 주요국의 환율 불안은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UR 타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이 완전히 정립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企業의 세계화와 소유구조의 변화 등이 급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만큼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OECD 가입으로 이들 이슈에 대한 정보 획득과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消費者로서의 일반 국민들은 OECD 가입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외국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며, 시장 개방으로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또한 소비자 보호, 어린이 보호, 건강 기준 등의 강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OECD 가입과 환경문제

한편 OECD 가입은 環境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가입한다고 우리나라가 당장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범준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요구는 계속 거세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OECD가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환경관련 규범이 엄격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環境의 改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환경기술의 개발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무역에서의 환경관련 規制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기준이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負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과 관련한 각종 國際規範들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OECD 가입

만에 의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OECD 가입으로 환경과 관련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OECD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등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1991년 OECD 각료이사회에 요청으로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1993년에는 무역과 환경 이슈와 관련한 OECD 절차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OECD 貿易·環境 공동위원회에서는 PP Ms 등 10개 작업과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며, OECD의 연구결과는 WTO, UNEP, UNCTAD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환경관련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결의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는 더욱 커져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역·환경 이슈는 지구환경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환경기술 등에서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競爭力 弱화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원료의 취득에서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공정과 생산방식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PPMs 규제

논의는 OECD에서도 전문가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貿易規制措置로 연결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OECD 가입으로 당장 협약 상의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겠지만 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늘리는데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OECD 가입은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機會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OECD 가입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先進化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우리가 얼마나

가입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OECD 가입이 곧바로 先進國 進入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나라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4년 현재

		GDP(10億 달러)	수입액/GDP(%)	ODA/GDP ¹⁾ (%)
미	국	6,737	14.2	0.20
일	본	4,655	9.9	0.30
독	일	2,053	23.7	0.39
프	랑 스	1,331	19.5	0.63
영	국	1,025	26.5	0.34
이	탈 리 아	1,024	18.8	0.31
캐	나 다	547	38.4	0.46
스	페 인	466	24.0	0.27
맥	시 코	376	28.5	—
네	덜 란 드	331	42.0	0.86
호	주	324	24.7	0.37
스	위 스	280	31.2	1.03
벨	기 에	227	106.6	0.46
오	스 트 리 아	197	42.6	0.39
스	웨 덴	192	32.3	0.30
덴	마 크	147	29.9	1.02
터	어 키	103	31.1	—
노	르 웨 이	101	43.6	1.16
핀	란 드	97	22.7	0.64
포	르 투 칼	78	43.6	0.36
그	리 스	78	28.2	—
아	일 랜 드	52	75.0	0.16
뉴	질 랜 드	49	32.7	0.26
룩	셈 부 르 크	9 ¹⁾	—	0.26
아	이 슬 랜 드	6 ¹⁾	26.6 ¹⁾	—
(한	국)	(376)	(31.9)	(0.04)

자료 :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st quarter 199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Series, 1994.

주 : 1) 92년 기준, ODA는 공적개발원조